

연구보고서
①

남북한 학술정보 교류 방안

북한의 학술정보 유통 현황 및 교류방안을 중심으로

우리 협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위탁받은 ‘남북한 학술정보 교류방안’ 용역사업을 2001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수행하여 12월 중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널리 도서관계에 알려 향후 지속적인 남북한 도서관간 및 학술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논의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허락을 받아 이 연구의 요약문을 본지에 재수록한다. • 편집자 주

· 연구책임자 : 한상완(연세대) · 연구원 : 곽동철(청주대), 송승섭(통일원), 한상길(대림대)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방법

지난 해 6.15선언이후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술 및 문화부문 교류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각종 학술관련 기관과 그 운영체계를 비롯하여, 학술정보의 생산 및 유통현황 등 세부적인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도 없고, 심도 깊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남북한 사이의 학술정보 교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바,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남북한 협력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학술정보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학술정보 기관과 학술 정보의 유통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효율적인 남북한간의 학술교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중심의 역사적 연구방법과 함께 분석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제론적 접근법과 비교론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북한의 학술정보 기관 및 학술정보의 유통체계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및 각 성의 학술관련 기관의 교육 및 과학기술체계를 조사하였다. 특히 실제적인 정보 유통기관으로서 과학원, 과학기술통보사, 연구소 및 관련 협회, 대학 및 대학도서관, 유관기관으로서 출판사 등 각종 현황을 조선대백과사전 등 북한 원전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또한 이들 학술정보유통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에서 생산해 내는 각종 학술지의 성격과 특징 등을 분석하여 북한의 학술활동과 그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 철저히 파악되지 못했던 북한의 학술정보현황과 그 유통체계를 파악함으로써 북한에서의 학술정보 생산과 유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다음, 앞서 파악한 북한의 학술정보 체계와 그 유통현황을 기초로 하여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 중국 등의 현지 출장, 공청회 등을 통해 얻은 관련 사실과 정보를 종합하여 남북한 학술정보 교류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상술한 연구를 통해 정리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북한의 교육정책과 교육이론

북한은 해방 이후 일본 제국주의 교육제도를 탈피하고 새로운 교육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는데 결국 그 모델은 소련식 사회주의 교육방식이 되었다. 이는 본격적으로 6.25전쟁 이후, 경제 복구의 일환으로 학제를 개편하고 교육시설을 확장하는 가운데, 교육과 생산노동의 정치사상교양의 강화, 의무노동제도의 채택, 전반적 무상교육 실시 등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정책으로 정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기본적인 학제와 구조는 북한의 정치, 경제상황과 연동되어 조직, 운영되었는데 사회구성원간 사상, 기술, 문화수준에서 차이를 없애고, 노동계급화, 혁명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 1) 이론과 실천 또는 교육과 생산의 결합원리이다.
- 2)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또는 병진원리이다.
- 3) 교육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수단이자 과정이기 때문에 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론과 정책은 북한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 먼저, 무상교육의 확대에 의한 국가 부담이 커지면서 대학생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장대학, 여장대학, 농장대학 등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를 전체 1/3수준으로 확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의 수준을 하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교육과 생산의 결합이론으로 이공계 단과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체제와 생산현장 중심의 교과과정체제가 구축되었으나 이로 인해 대학의 편중현상과 졸업생의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저하를 가져왔다.

(3)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정치경제체제와 기술혁신이론, 교육이론과 관련 정책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형성 발전되었지만 사회주의적인 비효율적인 관리체제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먼저, 북한은 1960년대부터 경제와 국방의 병진건설의 영향을 받아 비교우위에 적합하지 않은 중공업우선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계획에 의한 자원배분 정도가 심화되고 만성적인 경공업 제품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과학기술정책에서도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 관련 연구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자력갱생 정책을 통해 공업원료의 60~70%를 국내산으로 충족하고 자체적으로 순환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려 함으로써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 등의 자체 원료와 연료,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연구에 치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러한 경제와 국방의 병진건설 정책으로 기계공업과 군사무기 현대화에 필요한 연구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청년들의 장기복무로 첨단기술의 조기 습득과 계속교육에 큰 장애가 발생하였다.

북한에는 이밖에도 기술혁신이론에서 연구와 생산의 결합이론과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1970년대 초부터 크게 강조된 주체의 기술혁명 이론 등의 영향으로 생산 현장에 필요한 연구가 강조되었고, 과학원 등의 국가연구기관도 미래지향적 연구보다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에 치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

다.

(4) 북한의 학술기관과 학술정보 유통

북한에서의 학술 유통의 근간이 되는 각 종 학술자료 등 과학기술자료의 수집은 이른 바 과학기술통보사업으로 불리어지며, 주 정보원은 국내외의 과학기술도서, 잡지들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발명창의고안자료, 학위논문자료, 공업카탈로그, 규격자료 등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유통하는 것이다.

북한의 과학기술통보사업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이나 혼란이 없다. 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내각을 비롯한 각 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통하여 과학기술과 생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 사이를 연계시킴으로써 상호간 협조 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북한의 과학기술통보기관은 중앙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 내각의 위원회, 부 및 기타 중앙기관들에 조직된 부문별 과학기술통보기관, 각 도 행정경제위원회에 조직된 지역별 통보단위, 공장, 기업소 및 과학연구기관들에 조직된 말단통보단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문별 계층별로 이루어 졌으며, 상호간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의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발간하는 국내과학기술통보잡지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발명, 기술혁신 자료 등을 주로 신계되며, 외국과학기술통보잡지는 물리, 수학, 생물학, 자동차 등 과학부문별로 나누어져 발간된다. 외국과학기술통보잡지는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추세와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번역하여 편작자료, 초록자료, 색인자료 등으로 편집된다.

북한의 학술기관 및 연구개발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과학원 중심적이고, 과학원이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지원보다는 생산현장에 대한 지원이 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까지 국가 연구수요의 대부분을 과학원이 각 생산성 산하 연구소들을 지도하여 수행하였고, 대학과 기업의 연구활동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미약하였다.

현재 북한에는 과학원 산하에 약 120여개의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1999년도 중국과학원 산하연구소 115개와 거의 유사한 수치로 국토면적과 인구, 경제규모에서 비교가 안 되는 북한이 중국과 대등하거나 더 많은 수의 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야별로 보면, 중국과학원에 비해 기초과학인 수학물리 분야가 극히 적고, 기술과학 분야가 월등히 많음으로써 생산현장에 더욱 근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조선컴퓨터센터(KCC), 평양정보센터(PIC) 등의 컴퓨터관련 교육, 연구기관들이 확대되고, 소수 우수 대학에서 첨단기술연구도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과학원 중심의 이공계열위주의 학술체계를 갖추게 된 원인은, 1)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가 초기부터 추진한 중공업 우선 발전정책과 함께 이공계 단과대학 위주로 급속히 발전하였으나, 해방 후에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지식인들이 적었고, 특히 자연과학 부문에서 더욱 심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방 직후부터 학생들을 자연과학 부문에 70~80%, 사회과학 부문에 20~30%의 비율로 받아서 교육시키게 되었다. 2) 교육과 생산의 결합이론과 이공계 단과대학 위주의 대학 구조로 학과 분포도 상당히 세분화하고 교과과정에서도 생산 현장과 밀접한 교육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생산 현장에 바로 적응하는 대학 졸업생들을 배출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교육체제의 커다란 장

점이지만, 이로 인해 북한은 특정 분야에 편중된 교육체제를 갖게 되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술 융합과 고도화된 체제에서 산업의 구조조정을 선도하지 못하게 되었다.

(5) 북한의 도서관 발전과정과 정보화 현황

북한의 도서관의 근본 목적과 기능은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혁명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제 강점시기나 한국전쟁 등 혼란의 시기에 잔재 청산과정에서 소멸한 대다수의 인텔리층을 대신하여 북한 주민을 계몽하고 선도해 나가야 할 대안적 사회교육 기관으로써 역할도 담당하였다. 특히 새로운 북한사회를 건설하고 지도자로서 김일성의 존재를 확고히 하고 경제기반을 재건해야하는 당시의 상황에서 학교 교육이외의 사회 교육의 일환으로써 도서관은 대단히 중요했다. 따라서 도서 출판사업과 교육사업으로 문맹퇴치운동 함께 도서관사업이 활성화되었다. 전국적으로 15,000여개의 도서관이 군중도서관과 과학도서관망을 형성하며 국가지휘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그 시설은 취약하고, 장서 현황은 인민대학습당이나 김일성종합대학교과학도서관 등 중앙의 일부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보잘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 현장 등 이동봉사와 적극적인 번역봉사 등 일부 사회주의적 특성을 갖는 수준 높은 봉사체계도 엿보인다.

도서관의 정보화 현황은, 인민대학습당, 김일성종합대학교과학도서관 등 대표적인 도서관과 과학기술중앙통신사 등 일부 기관이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민 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10여개의 지역망과 100여개의 부분망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인터넷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외관상 상당 부분 국가정보화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듯 하나, 이는 일부 지역과 기관 소수 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역적 계층간의 커다란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IT분야의 기술수준은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광명데이터베이스나 소수 소프트웨어와 군수용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보통신산업과 교육 기반이 부실하여, 경쟁력이 없다. 대학도서관도 일부 전자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나친 생산현장과의 연계로 인해 학술적인 독자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전문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6) 북한의 학술활동 분석

북한의 학술지는 지금까지 100여 종 정도가 확인되고 있는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어문학), 철학연구, 조선어문, 조선고고연구, 력사과학, 사회과학원학보, 조선문학 등 일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과학기술분야로 치중되어 있다. 분석이 가능한 과학기술관련 학술지 60여 종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의 과학기술 논문과 특허 등을 번역해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것 또한 1990년대 와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무역단절로 위축되어 그 발행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북한의 국내 학술지 발행량도 크게 감소하였고, 투고 논문에서도 이론이 증가하고 질적인 수준이 크게 저하하였다. 참고문헌은 러시아와 일본, 중국의 3개국에 거의 의존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러시아가 감소하고 영어권 문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문헌은 일본

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아 재일 동포들의 학술지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에도 기업의 논문투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대학과 연구소, 특히 대학교 과학기술자들의 투고와 공동 논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기업 생산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이의 정상화에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자들이 거의 모두 동원된 결과로 볼 수 있다.

SCI등 해외 유명 학술지에 대한 논문 투고도 전반적으로 극히 저조하나 1990년대 들어 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이마저도 중국 등의 외국인 학자가 제1저자로 투고한 것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이들과의 유학생 교류와 과학기술교류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거의 유일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유학생 교류와 공동논문 투고이다.

(7) 북한의 대내·외 학술교류현황

남북한간의 학술교류는 1989년 런던의 [유럽한국학대회]에서 남북한학자가 처음으로 공식 접촉한 이래 지금까지 교류가 성사된 건수가 150여건이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다. 남북한 교류를 분야별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통계상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어쨌든 의견상으로는 비교적 활발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학자들간의 직접적인 왕래는 10여건이 조금 넘는 정도이다. 서울(1991.11)과 평양(1993.11)에서 개최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평양동북아 경제포럼](92.9), [일본의 전후 처리문제에 관한 국제토론회(1993.11)], 성균관대(1998.4~5), 경남대(1998), 강원대(1998) 총장 등의 방북, 선문대 이형구 교수와 동국대 김동현교수의 개성 영통사지조사(2000),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의 일제 강제병합자료 전시회 개최 및 학술교류문제(2000) 등이 있었다. 남북한 학술교류는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시기별로는 하계방학 중인 7, 8월에 집중되어 있다. 이 밖에도 경향신문사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의 「북한문화자료 정보화사업」(2000),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합의·추진(2001) 등은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북한은 전반적인 외국과의 교류 단절에도 불구하고, 재중, 재일 동포들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동포들과의 학술교류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재일 동포 과학기술자들은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를 중심으로 북한 각 기관과의 공동연구와 각종 실험기자재 지원, 학술지 지원, 연구비 지원 등 거의 포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로 볼 때, 첨단기술 영역에서 북한의 해외정보 입수에 대한 재일 동포들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다. 특히 재일 동포들은 최근 북한에서 크게 부상하고 있는 IT분야에서도 활발한 대북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여기에는 훈련센터 설립과 인력양성 지원, 공동연구, 설비 지원, 참고문헌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분야에서 재중 동포들의 대북 지원이 상당히 미미한 것과 뚜렷이 대조된다. 이러한 해외동포들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동향은 학술교류에도 바람직한 남북한 협력모델을 창출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8) 교류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등

〈교류방안〉

남북한간 학술정보 교류는 북한의 외환보유 능력이나 재정상태, 사회체제를 고려해 볼 때 먼저 남한측에서 학술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학문별 전문가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 사이의 학술정보 교류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호 실리도 중요하지만 남북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남북의 민족적 동질성을 이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로서 남북한간 학술정보 교류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첫째, 남북한 당국간 직접 대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정부차원에서 학술정보 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관련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국가도서관, 정보센터 등 학술정보기관들과 출판기관들이 북한의 상대기관들과 공식적으로 분야별 정보교류와 출판교류를 추진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결과의 예측이 그리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둘째, 각 학문 분야별로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 컨퍼런스를 개최할 때 관련 인사나 해당 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발표 또는 토론 등에 참가시키는 방법을 추진할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으로는 국소적인 학술정보를 교류하는데 그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셋째, 중국, 일본 등 제3국을 통한 학술교류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중국의 연변대학이나 일본의 국제고려학회 등에서 한국과 북한이 참석하는 형태로 학술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행에 옮긴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중국의 간접적인 지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연변지역의 조선족이 한국과 북한에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한 학술정보의 교류가 목적임을 밝히고, 중국의 한국 전문가들도 참여시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술정보 교류의 장을 한국, 북한,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의 고려인, 일본의 재일동포, 기타 각국의 교포로 그 범위를 넓혀 추진하고, 이를 상설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금년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정치·군사 및 경제 부문의 협력을 진작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학술정보의 교류도 일단은 정부차원의 남북관계형성과 맥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술정보의 교류는 전제 조건으로서 정치적 또는 제도적인 교류 기반이 갖추어지면 남북한 공동이익과 실리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급격히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학술정보 교류는 현재까지 밝혀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낙후성과 학술정보유통망의 미비 등을 볼 때, 북한과의 합작사업이나 경제협력 못지 않게 중요하다. 다만 학술정보 교류가 그 성격상 정치적 또는 경제적 협력과 달리 구체적이고 가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뒤쳐질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학술정보 교류를 통한 해당 학문별 전문가 교류와 학술정보의 전달 그리고 산업구조의 개편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체제의 개선이 달성되지 못하면 여러 타 부문에서의 교류, 특히 경제교류의 성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북한측의 학술정보 요구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남북한 학술정보 교류를 추진·발전시켜 간다면 통일이전 단계에 남북한 공동연구개발체제의 인프라로서

공동학술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학술정보 교류에서 공동 이익 추구하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단계적 접근 노력은 상호이익 실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비용을 절감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남북한간 학술정보 교류에서 온라인상의 정보교류 사업은 장기적인 과제로 넘기고, 우선 넓게는 신문 등 대중적인 출판물 교류로부터 세부적으로는 학술잡지, 소장목록 등과 같은 아날로그적 학술정보의 교류로부터 시작하면서와 양자간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정보교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점차적으로 남북한 도서관간 또는 유관 정보센터간 오프라인상의 정보 교류 등을 착수할 준비를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온라인상의 학술정보 교류를 염두에 두고 관련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정책적 시사점〉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대북한 학술교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사안과 향후 연구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1) 북한 연구에서도, 급격한 통일을 이룩한 독일식 사례 연구의 치중보다는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염두에 둔 중국식 사례 연구가 또 하나의 대안될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0여 년간,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자국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므로, 이런 경험을 통해 북한에게도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북한 협력 모델은 재일 동포들의 대북한 과학기술 협력 사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재일 동포들은 북한의 현실에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북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 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좀 더 바람직한 대북한 학술교류 협력 모델을 찾아내고, 이들을 포함한 3자간 공동연구를 통해 좀 더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간의 학술교류와 협력모델도 북한의 현실적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하고 국민생활과도 직결되는 의약, 농업기술, 과학기술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술과 인력 양성,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IT 산업 육성을 지원해, 자연스럽게 북한의 개방과 원활한 학술교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 현재 남북한 학술교류가 어려운 것은 남한의 시장 메커니즘과 북한의 계획 메커니즘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므로, 북한의 연구 개발체제에서 물질적 자극과 과학기술자돌격대 등 시장 메커니즘과 유사한 모델을 찾아내 이를 매개로 하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수 연구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공동연구자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해 점차 개방협력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5) 북한의 개방 모델과 남한의 각종 자금을 통합해 공공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제3섹터 유형의 협력기금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강한 물질적 인센티브를 가지는 남북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6) 남북한 협력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서로에 대한 정보가 극히 취약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남한의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와 북한의 인민학습당,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등 기본적으로 정보 유통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의 교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두 기관 모두 국가의 과학기술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들간의 협력을 통해 취약 분야의 정보를 교류하고, 표준화과정을 거쳐, 인식의 공유 속에서 점차 한민족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확대, 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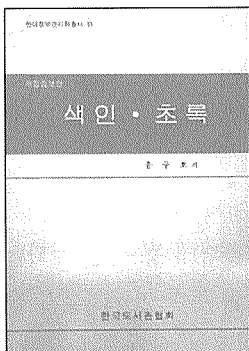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

이상에서 남북한간의 학술교류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후속 연구를 위해 제안한다면 무엇보다도 북한문제에 관련한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 프로젝트 발주기관 역시 국가의 정책적 목표와 실현을 구체화하기 전에 기초조사 등 기본연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 예로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991년부터 3년간 북한의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94년에는 남북한 국가표준제도 현황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등 수 년간 기반 연구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러서야 각 종 정책적 모델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연구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하에 보다 전문화되고 밀도 깊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식기반과 체제 등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 간

개정증보판
색 인 · 초 록

윤구호 저



주요목차

- 2차자료
- 색인 및 초록의 발전과정
- 통제어휘집
- 색인작성법
- 색인의 평가
- 초록작성법
- 자동 초록
- 초록의 평가

신국판/335쪽/정가 12,500원
회원보급가 10,000원
ISBN 89-7678-053-1

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02-535-4868 팩스 02-535-5616 e-mail : klanet@hitel.net